

복지지위가 복지인식에 미치는 영향: 정부신뢰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최 고 은**

요약

본 연구는 복지지위가 복지인식에 미치는 영향이 각 개인의 정부신뢰 수준에 따라 상이하게 나타나는지 실증적으로 분석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복지인식의 유의미한 예측요인으로 알려진 복지지위에 주목하며, 각 개인의 복지지위를 단일한 차원으로 측정하고자 복지부담-혜택 간 격차를 ‘물질적 희생(material sacrifice)’이라는 개념으로 정의하였다. 또한 ‘물질적 희생’과 정부신뢰가 ‘복지확대를 위한 비용부담의지’로 구체화되는 복지인식에 가지는 직접효과와, ‘물질적 희생’이 복지인식에 미치는 영향을 조절하는 기제로서 정부신뢰의 상호작용효과를 검증하였다. 이를 위해 「한국복지패널 8차년도」의 「복지인식부조사」에 응답을 완료한 4,185명을 연구대상으로 위계적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결과, 복지지위에서 복지부담(조세 및 사회보험료지출)이 복지혜택(사회보험, 공공부조급여 및 각종 정부보조금)보다 커지는 ‘물질적 희생’이 증가할수록 ‘복지확대를 위한 비용부담의지’에 부(-)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정부가 사회정책을 유능하게 수행할 것이라는 신뢰가 높아질수록, ‘물질적 희생’이 ‘복지확대를 위한 비용부담의지’에 미치는 부(-)적인 영향이 완화됨이 확인되었다. 이는 복지태도를 결정하는 일차적 동기인 자기이해 역시 정부기능에 대한 믿음이나 기대에 의해 조절될 수 있음을 의미하며, 복지확대를 위한 사회적 합의를 견인하기 위해 사회정책에 대한 신뢰 확충이 뒷받침되어야 함을 시사한다.

주제어: 복지지위, 복지혜택, 복지부담, 물질적 희생, 정부신뢰, 복지인식

* 본 논문은 저자의 석사학위논문(복지지위가 복지인식에 미치는 영향: ‘물질적 희생’에 대한 정부신뢰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2015) 및 제8회 한국복지패널학술대회(2015.09.19.)발표문을 요약·수정하여 작성되었음.

** 서울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석사(superchoigo@snu.ac.kr).

1. 서론

본 연구는 복지지위가 복지인식에 미치는 영향이 각 개인의 정부신뢰 수준에 따라 상이하게 나타나는지 실증적으로 분석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각 개인의 복지지위를 단일한 차원으로 측정하고자 복지 부담·혜택 간 격차를 ‘물질적 희생’이라는 개념으로 정의하고, 물질적 희생이 복지인식에 미치는 영향을 조절하는 기제로서 정부신뢰의 영향력을 검증하고자 한다.

분배의 주요 기제로서 복지정책은 세금을 납부하는 시민들과 이들의 세금으로부터 혜택을 제공받는 수급자가 일치하지 않기에 다양한 분배 장치들에 대한 기여자의 동의와 이해는 필수적이다. 이에 복지제도를 둘러싼 시민들의 이해관계에 따라 발현되는 복지인식을 파악함과 동시에 기여자들의 동의와 이해를 이끌어내는 매커니즘을 밝히는 것 또한 중요하다(Brooks & Manza, 2006).

복지인식을 결정하는 요인에 대한 그동안의 연구흐름은 크게 두 가지이다. 하나는 개인의 인구사회학적 요건 및 가치지향 등이 복지인식 및 제도에 대한 태도를 결정한다는 입장(안치민, 1995; Svallfors, 2002)이며 다른 하나는 복지제도를 둘러싼 공통의 이해관계나 복지에 대한 수요(needs) 등이 중요하다는 입장(안상훈, 2000; 주은선·백정미, 2007; Pierson, 2001)이다. 후자의 흐름은 개인이 복지국가를 통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권리를 향유할 수 있는지에 대한 판단이 복지국가에 대한 지지를 결정하는 핵심 요인이 된다는 점을 강조한다. 그러나 기여자와 수혜자가 구분된다는 점에서 복지정치는 권리와 의무의 다면적 상호관계로 이해되어야 한다(안상훈, 2000). 이에 안상훈(2000)의 ‘복지지위론’에서는 가시적인 형태의 복지급여·서비스를 통해 권리를 향유하는 복지수급자와, 사회 전체 복지권 확대에 따라 비용부담 의무를 가지는 복지납세자 간 복지인식의 균열을 탐색한다. 특히, 권리·의무를 둘러싼 복지인식 균열에서 한 개인은 복지수급자, 복지납세자의 지위를 다면적으로 점하고 있기에, 정책 영역과 대상에 있어서 자신의 물질적 이익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지지 및 반대 입장을 결정할 것이다. 사회 전체 복지권 신장에 따른 재정적 의무 증대는 사회구성원의 납세 부담을 증가시킨다. 이 때 현재적인 복지 편익이나 잠재적 수혜가능성이 동반되지 않은 일방적 복지의무 증대는 복지납세자의 물질적 희생의 가능성을 높여, 해당 정책 및 복지제도 일반에 비우호적 인식을 가지게 할 공산이 크다(Hetherington, 2005; Rudolph & Evans, 2005).

그렇다면 기여자들의 동의와 이해를 이끌어내는 요인에는 무엇이 있는가? 복지 권리·의무 간 동태적 관계에서 발생하는 부담 수준이 높아진다고 해서 각 개인이 모두 동일한 수준의 반(反)복지인식을 가지는가? 그 해답으로 Hetherington(2005)의 ‘물질적 희생이론(material sacrifice theory)’은 기여자들의 정책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정치적 요인으로 정부신뢰에 주목한다. 그는 재분배정책유형에 따라 한 개인이 가지는 비용과 편익의 귀착범위가 달라지는데 일정부분 편익이 비용보다 큰 상황에서도 물질적 희생을 감수하고자 하는 성향은 각 개인이 가진 정부신뢰 수준에 영향을 받는다고 설명한다. 이 이론에 근거하면, 복지확대로 인해 물질적 희생을 주로 부담하게 될 집단은 복지확충에 대해서는 부정적이

지만, 그 중 상대적으로 높은 정부신뢰를 가질 경우, 반(反)복지성향은 다소 완화될 것이라 예상할 수 있다. 결과적으로 정부신뢰와 복지지위와의 동태적 관계에 따라 복지태도는 달라질 공산이 크다.

‘물질적 희생이론(material sacrifice theory)’에서 물질적 자기이해를 거스르게 하는 정치적 요인으로 주목한 정부신뢰는 ‘정부가 산출하는 각종 산출물에 대한 평가, 즉 ‘정부가 국민들의 기대에 부응하여 잘 운용되고 있는지에 대한 기본적인 평가 정향(Hetherington, 1998)이다. 각각의 정책내용이 갖추어야 할 규범적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국민들은 정부성과에 대해 긍정적 평가를 하게 되며, 이는 정부의 공공정책 산출에 대한 승인·불승인으로 이어진다(Muller & Zucam, 1977). 이에 본 연구는 ‘기술적으로 유능한 정부 역할수행에 대한 기대’인 기능적 신뢰에 주목하여(Barber, 1983), 각종 사회정책에 대한 평가 정향이 그 자체로 복지정책의 집행과정에서의 동의와 순응을 이끌어내는지 밝혀보고자 한다.

특히, 복지확대는 필연적으로 개인의 세금부담 증대를 의미한다. 그러나 한편으로 복지수혜범위 확대와 제도의 성숙을 통해 개인이 미래의 잠재적인 복지수혜자가 될 가능성을 동시에 증가시키기도 한다. 이에 복지확대 상황에서 개인은 자신의 단기적 이익과 장기적 이익, 그리고 개인적 이익과 전 사회적 이익이 충돌하는 ‘사회적 딜레마’ 상황에 봉착하게 된다(김신영, 2010). 복지확대에 대한 개인의 득실을 일종의 ‘사회적 딜레마’ 상황으로 규정한다면, 모든 개인은 개인의 장·단기적 이익, 그리고 전 사회적 이익 및 비용을 모두 감안하여 복지태도를 결정할 것이다. 이 때 복지지형을 둘러싸고 혜택보다 부담이 큰 상황에서 각 개인에게 ‘자기피해가 가능성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감수하는 정부의 능력과 선의에 대한 믿음’(Mayer et al., 1995)이 존재한다면, 자신의 물질적 이해를 뛰어넘어 복지정책에 대한 동의와 순응을 표방할 것이다. 이에 본 연구는 복지제도를 둘러싼 부담(월평균 조세 및 사회보험료 지출)과 혜택(월평균 사회보장급여액)의 비교를 통해 복지지위 상의 물질적 희생수준을 측정하고, 이것이 복지인식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정부신뢰가 어느 정도 상쇄하고 있는지에 대해 실증적으로 검증해 보고자 한다.

요컨대, 본 연구는 ‘복지지위론’과 ‘물질적 희생이론’에 입각하여 복지지위에서 발생하는 각 개인의 물질적 희생수준이 ‘복지확대를 위한 비용부담의지’로 구체화되는 복지인식에 미치는 영향에서 정부신뢰의 조절효과를 분석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복지지위 상의 물질적 희생수준이 복지인식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또한 정부신뢰가 복지인식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마지막으로 복지지위 상의 물질적 희생수준이 복지인식에 미치는 영향이 정부신뢰 수준에 따라 상이하게 나타나는지 확인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한국 복지정치맥락에서 정부신뢰가 단순히 국민들의 규범적 판단 영역에 그치는 것이 아니며, 자신의 경제적 이해를 거스르면서도 물질적 희생을 감수하는 방향으로 정책태도를 표방하게 하는 정치적 원동력이 되는지 탐색해보고자 한다. 결과적으로 복지정책 수립 및 집행에서 혜택과 부담에 매우 민감한 수혜자와 기여자 간 ‘정치적 긴장’을 완화하는데 있어 정부신뢰의 영향력을 확인하는 것을 본 연구의 의의라 하겠다. 본 연구의 구체적인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1. 복지지위 상의 물질적 희생수준은 복지확대를 위한 비용부담의지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연구문제2. 정부신되는 복지확대를 위한 비용부담의지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연구문제3. 정부신되는 복지지위 상의 물질적 희생수준이 복지확대를 위한 비용부담의지에 미치는 영향을 조절하는가?

2. 이론적 배경 및 선행연구 고찰

1) 복지지위가 복지인식에 미치는 영향

복지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연구흐름은 크게 개인의 인구사회학적특성 및 개인의 가치지향이 복지인식 및 태도를 결정한다는 입장, 인구사회학적 조건보다 사회제도를 둘러싼 공통의 이해관계나 복지에 대한 수요(needs) 등이 중요하다는 입장으로 나뉜다. 성별, 연령, 세대, 교육수준, 고용지위 등 각종 인구사회학적 요인을 강조한 연구들은 한 시대를 살아오면서 겪은 고유한 경험을 통해 형성된 개인의 가치관과 이념적 성향이 복지에 대한 상이한 인식으로 표출된다고 주장하였다(안치민, 1995; Svallfors, 2002). 또한 개인의 가치와 인식이 정부와 정책에 대한 태도를 결정한다는 연구에서는 빈곤 및 불평등에 대한 인식, 개인주의·집합주의의 성향, 복지수급자에 대한 인식, 정치적 성향 등에 따라 복지인식에 차이가 나타남을 밝혔다(박희봉·이희장, 2003; 이중섭, 2009).

Pierson(2001)은 개인의 계급적 지위보다는 복지제도와 관련된 물질적 이해관계에 따라 개인의 인식과 행동이 달라진다고 주장하였다. 이는 개인의 계급적, 경제적 지위가 복지인식에 전적으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국내외에서의 다른 논의들과 맥락을 같이한다(안상훈, 2000; 주은선 외, 2007; 김신영, 2010; Andres & Heien, 2001; Pettersen, 2001). 특히 안상훈(2000)의 ‘복지지위론’은 기존 복지제도 운영을 통해 형성된 복지수급자, 복지납세자, 복지서비스제공자로서의 이해관계 사이의 복지동맹의 형성과 갈등 가능성에 주목하였다.

자기이해관계론은 복지에 대한 지지적 태도의 일차적인 동기로 자기이해관계(self-interest)를 꼽는다(Geliseen, 2000). 이 논의는 정책지지에 있어서의 정치적 선택은 시장에서의 선택과 마찬가지로 자신의 물질적 이득을 극대화하는 경제적 합리성에 기초하여 이루어진다는 가정에 근거한다(Sears & Citrin, 1982). 즉, 합리적 개인은 자신의 수요(demand)에 근거하여 현재 혹은 미래에 개인적인 이익을 제공할 가능성이 큰 정책을 선호하고 지지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Pettersen, 2001; Lipsmeyer & Nordstrom, 2003). 자기이해와 관련된 복지인식 연구들을 통합하여 하나의 분석틀로 정리한 것이 세 가지 차원의 ‘복지지위론’이다(안상훈, 2000). ‘복지지위론’에서 주목한 새로운 균열은 복

지욕구를 시장에서의 사적 소득을 통해 충족할 수 있는 집단과 국가복지를 통해서만 해결할 수 있는 집단 사이에 형성되는데, 복지에 대한 이해관계는 권리·의무의 축을 중심으로 복지수급자로서의 지위, 복지납세자로서의 지위, 복지서비스제공자로서의 지위라는 세 가지의 차원으로 구체화된다고 보았다. 복지지위론은 마샬의 시민권론에 입각한 기존의 계급 균열 중심의 복지정치 논의가 권리의 측면만을 강조하는 경향이 있음을 지적하고 복지정치의 균열은 의무의 측면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한다(안상훈, 2000). 이에 본 연구에서도 복지권리·복지의무의 축을 중심으로 복지수급자와 복지납세자에게 부과되는 혜택과 부담에 집중해보고자 한다.

(1) 복지권리(혜택)차원

복지수급자로서의 지위를 가지게 되면, 복지국가 프로그램 확장이나 축소에 대하여 나름대로의 물질적 ‘이해관계’를 획득한다. 이에 가시적인 형태의 복지급여나 서비스를 받는 복지수급자는 공공복지 이용경험이 없는 사람들에 비해 친(親)복지적 태도를 가질 공산이 크다.

복지수급자로서의 지위는 개별 복지 프로그램의 보편성 정도와 질적 수준에 따라 달라진다. 예컨대 한 나라의 복지급여가 선별주의를 표방할수록, 복지수급자로서의 지위를 획득하는 사람들의 수는 줄어들 것이며, 복지급여의 질이 떨어질수록 복지수급자로서의 지위와 관련된 이해관계 범위는 좁아질 것이다(Kangas, 1995; Shaverm, 1998; 김은지·안상훈, 2010에서 재인용). 따라서 복지권리를 획득하는 대상을 확대하고, 그러한 지위의 질을 고양하는 것이 친(親)복지인식을 확대하는 핵심적 전략이 될 수 있다. 그럼에도 아직 공공복지가 충분히 발달하지 않은 한국의 복지지형에서, 복지욕구 및 지위를 기반으로 한 이해관계가 명확하게 구축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크다(주은선·백정미, 2007). 여전히 빈곤계층, 여성, 노인 등 복지수요를 가진 집단에 대한 복지서비스가 충분치 못하기에, 공공복지이용경험을 통한 복지권리획득은 비용·수혜의 축을 중심으로 복지에 대한 잠재된 이해관계를 깨닫게 하는 계기로 작용할 수 있다.

실제로 복지인식 형성에 있어 ‘복지권리’의 역할을 강조한 실증연구들은 공공복지 수급을 통해 발생하는 물질적 편익(benefit)은 복지제도에 대해 가지는 자기이해(self-interest)를 반영함으로써 복지인식에 차이를 초래한다고 보았다. 복지제도 수혜자로서 가지는 실질적이며 구체적인 이득을 통해 해당 제도 및 복지일반에 대한 우호적 인식을 형성하기 때문이다(Orschot, 2000). 주은선 외(2007)도 모든 계층에 있어 공공복지 수급 및 복지서비스 이용경험이 친(親)복지적 인식을 확대시키는 유의미한 요인임을 검증한 바 있다. 개별제도에 대한 복지권리에 주목한 연구들도 있다. 안상훈 외(2013)은 주거 소비와 관련된 자원을 스스로 민간 시장에서 조달할 수 있는 자와 공적 제도의 도움을 받는 자 간에는 복지수급자로서의 지위에서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 착안하여, 주거복지정책수급여부가 우호적인 복지인식에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았다. 신자은(2009)도 외래 이용횟수, 입원횟수, 입원일수 등의료이용현황변수를 통해 건강보험의 급여 및 서비스에 대한 수혜정도가 높을수록 건강보험에 대해 우

호적인 인식을 형성한다고 밝힌 바 있다.

(2) 복지의무(부담)차원

복지지위의 또 다른 측면은 복지 권리의 신장에 따른 재정적 의무를 배분하는 방식과 관련된다. 재정적 의무란 사회전체에서 발생하는 복지비용을 의미하는데, 복지확대는 필연적으로 사회구성원에게 그에 따른 비용을 부담하게 하는 의무를 발생시키기 때문이다. 이에 복지납세자 개인이 지니는 경제력의 수준, 납부하는 세금·기여금의 구조 및 수준은 복지인식의 균열을 파악하는데 있어 핵심적 요인이다(김은지·안상훈, 2010). 복지납세자지위가 가지는 이해관계는 다음과 같다. 복지납세자로서의 지위는 주로 경제적 이해관계에 기초하는데, 개인의 소득이나 자산으로 평가되는 부의 수준이 높을수록 납세 부담은 증가한다. 세금이나 기여금등의 납세 부담이 증가할수록 물질적 이해관계에 기초하여 복지에 대한 지지 성향은 낮아질 것이다. 그러나 높은 납세 부담이 즉각적으로 반(反)복지인식으로 연결되는 것은 아니다. 개인들의 복지태도를 결정하는 것은 복지 권리·의무 축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복지지위의 다면적 상호작용이기 때문이다(안상훈, 2000). 앞서 언급하였듯이, 복지권의 확대는 필연적으로 사회 전체의 세금부담에 대한 의무를 확산시킨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복지수혜범위 확대와 제도의 성숙을 통해 개인이 미래의 복지수혜자가 될 가능성을 함께 증대시키기도 한다. 이에 복지확대 상황에서 한 개인은 권리·의무 축을 중심으로 개인의 장·단기적 편익과 비용을 감안하여 복지태도를 결정한다.

실제로 복지인식 형성에 있어 ‘복지의무’의 역할을 강조한 실증연구에서 복지납세자로서의 복지비용이 배가될수록 복지지출확대 및 복지에 대한 정부책임 등의 복지인식에 부정적 태도가 확인되었다(안상훈, 2000; 김은지·안상훈, 2010). 개별제도에 대한 납세자의 지위에 주목한 연구들도 있었다. 백화중·우해봉(2009)은 연금지위를 지역 및 사업장 가입자, 수급자 집단으로 구분하여 연금제도를 둘러싼 권리·의무 간 이해관계를 조망한바 있다. 물론 현 수급자의 경우도 대부분 국민연금 가입이력을 보유하고 있지만, 현 수급자와 납세자는 서로 다른 이해관계를 가진다고 가정한 연구결과, 현재 시점에 복지납세자의 지위를 가지는 지역 및 사업장 가입자가 연금 수급자에 비해 국민연금을 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자은(2009)과 이훈희 외(2011)는 건강보험인식에 대한 수급자와 납세자간 차이를 실증적으로 비교한 바 있다. 건강보험재정에 대한 의무를 측정하는 지표로 소득수준을 사용하였으며,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절대적인 건강보험료 납부액이 커지므로 공적건강보장과 관련하여 권리보다는 의무가 커질 수 있다고 보았다. 연구결과,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건강보험혜택에 비해 재정 부담이 과도하다고 인식하기에, 건강보험지출기대, 건강보험 역할강화에 대해 부정적 인식을 표출하였다. 이에 개별적인 복지제도 내에서도 복지납세자가 낮은 복지지지성향을 보이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2) 정부신뢰가 복지인식에 미치는 영향

복지인식은 복지를 추구하는 사회제도에 대한 가치, 태도, 행동지향 등을 포괄하는 개념이다. 가치 및 태도는 복지책임주체에 대한 인식과 복지실천의지로 표출되며, 복지인식은 이들 간의 관계의 총합을 말한다(최균·류진석, 2000). 특히 특정 정책에 대한 인식 및 판단은 ‘사실’의 문제보다는 ‘해석’의 문제에 가깝다(Fischer, 1998). 정책결정과정 역시 단순히 가치중립적인 입장에서 효율적 정책수단을 선택하는 과정이라기보다, 다양한 시민들의 가치 및 이해관계에 대한 정치적 조율과정을 의미한다. 이에 복지인식 역시 개인의 가치, 태도, 행동지향 등을 반영한 ‘정신적 작용과정’(mind change process)이라 할 수 있으며(Eran, 2006), 복지인식 결정에 있어 정부나 정치체제에 대한 ‘해석’이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정부나 정치체제에 기능에 대한 ‘해석’인 정부신뢰(trust in government)란 정부가 ‘믿을만하다는 것(trustworthiness)’을 의미한다. ‘믿을 만 하다는 것’은 제도 및 계약적 형식의 테두리 내에서 만들어지는 도덕적 공감대이며, 믿을만하다는 인식이 축적되어 점차 자발적인 신뢰(trust)가 형성된다(Ruscio, 1999). 그렇다면 정부에 대한 축적된 신뢰는 정책에 대한 선호 또는 지지에 구체적으로 어떠한 경로로 영향을 미치는가?

Nahayoshi & Sato(2014)는 정부에 대한 제도적 신뢰가 재분배정책에 대한 선호를 결정하는 의사결정과정을 분석하기 위해 Kroneberg(2010)의 ‘프레임 선택모형(Model of frame selection)’을 활용하였다. 이 모형에서 의사결정은 ‘상황에 대한 인식’(definition of the situation: frame selection), ‘상황에 맞는 적절한 행동의 구성’(a set of appropriate actions: script selection), ‘행동의 실행’(action selection)의 단계로 이루어진다. 이 모형에 의하면 각 개인은 상황과, 상황에 대한 인식, 즉 특정 상황을 바라보는 구조(frame)가 일치한다고 판단 시, 상황에 맞는 적절한 행동 구성(script selection)에 따라 자발적 또는 자동적으로 특정 행동을 선택한다. 만약 그렇지 않다고 판단 시, 효용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대안적인 행동을 선택하게 된다. 이를 정부신뢰와 정책지지와의 관계에 대입시켜보면, 재분배정책의 정당성을 인식하고 내면화할수록 복지제도로부터 직접적 수혜를 받지 못한다하더라도 자발적으로 복지정책에 대한 지지의사를 선택·표명하게 되는 것이다(Nahayoshi & Sato, 2014). 요컨대, 정부신뢰는 시민이 정부에 대해 가지는 주관적 ‘해석’의 결과물인데, 불확실한 상황에서 시민은 정부신뢰라는 잣대를 통해 정책의 결과를 예측하고, 이를 바탕으로 정책에 대한 의사 및 행동을 결정하는 것이다(Kim, 2005).

한편, 정부신뢰를 ‘시민의 기대와 정부성으로 구성되는 함수’로 정의하는 기존 연구들은(박정훈·신정희, 2010; Putnam, Pharr & Dalton, 2000; Sims, 2001; Van de Walle & Bouckaert, 2003; Hinnant & Moon, 2004; Kim, 2005) 시민들이 정부정책에 대한 정당성을 자발적으로 내면화하고 정부에 대한 제도적 신뢰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시민의 기대와 실제 정부성과 간의 정합성이 중요함을 강조한다. 즉, 정부신뢰란 ‘시민이 느끼기에 자신의 선호에 대하여 정부가 얼마나 반응 하는가를 의미하는 것으로

시민의 기대와 실제 정부 성과 간 차이에 따라 정부신뢰의 수준과 깊이가 결정된다(Putnam, Pharr & Dalton, 2000; Van de Walle & Bouckaert, 2003; Hinnant & Moon, 2004). 따라서 정책집행과정에서 정부의 정책능력, 윤리성 등이 시민들이 정부에 대해 가지는 신뢰수준을 결정하며(Sims, 2001), 정부성과에 대한 믿음에 기초한 정부신뢰는 정책의 집행과정에서 시민의 동의와 순응을 이끌어 내어 정책의 성공 가능성을 높이는 주요한 요인으로 기능한다(Newton, 2001).

정부의 정책능력 중 복지 분야와 정부신뢰와의 관계에 주목한 연구 중 Steinmo(1994)는 미국에서 복지에 대한 정부의 간섭을 반대하는 이유를 정치적 결정기구의 역할과 기능에 초점을 맞추어 설명하였으며, 아울러 정부의 신뢰구축과 복지정책 추진과의 연관성을 분석한 바 있다. Hetherington(2005)의 연구에서도 빈곤완화, 인종차별철폐와 같은 진보적 성격의 정책 목적을 지지하지만, 정작 해당 정책의 확대는 반대하는 경향의 원인으로 해당 정책을 전달하는 현 행정부에 대한 신뢰의 부족을 꼽은 바 있다. 반면, Rose(1991)는 국가가 시민들을 효율적으로 살핀다고 인식하는 경우에만 관료의 손에 복지를 맡기는 경향이 있다고 보았으며, Svallfors (2002) 연구에서도 정부를 신뢰하는 시민들은 세금징수에 불만을 덜 가지고 국가가 세금을 낭비할 가능성에 대해서도 덜 비관적임을 확인하였고, 이현우(2013)의 연구 역시 복지정책을 수행하는 기관의 공정성과 효율성에 대한 긍정적 인식을 복지에산확대 동의에 있어 중요한 변수로 지적한 바 있다.

위의 연구결과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본 연구가 주목하고자 하는 정부에 대한 기능적 신뢰가 복지인식에 미칠 영향을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하겠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정부신뢰의 다양한 측정개념 중 정부가 산출하는 각종 산출물에 대한 평가나 정부가 국민들의 기대에 부응하여 잘 운용되고 있는지에 대한 기본적인 평가 정향(Hetherington, 1998)인 ‘기능적 신뢰’를 기본으로 하되, 여러 정책 기능 중 사회정책기능에 대한 평가에 집중하여 ‘정부의 사회정책의 산출물에 대한 국민의 주관적인 평가를 그 구성개념으로 측정한다. 이는 국정 전반에 대한 형식적 차원의 평가보다는 정부가 산출한 사회정책에 대한 내용적, 기능적 측면을 강조하는 접근이라고 할 수 있다. 위의 논의를 바탕으로 정부의 복지기능에 대한 신뢰가 복지정책의 집행과정에서의 동의와 순응을 이끌어내는지 경험적으로 살펴 보기로 한다.

3) 복지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에서 물질적 희생과 정부신뢰 간의 상호작용 : ‘물질적 희생이론(material sacrifice theory)’을 중심으로

(1) 물질적 희생과 정부신뢰 간의 상호작용

재분배정책의 결정 및 집행과정에서 정부신뢰가 더욱 요구되는 이유는 무엇인가? Hetherington(2005)의 ‘물질적 희생이론(material sacrifice theory)’은 정부신뢰와 정책지지의 관계에서 있어서 정책 유형에 따라 ‘인지된 물질적 희생(perceived material sacrifice)’에 차이가 있음을 강조한다. ‘인지된 물

질적 희생'은 정책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물질적 비용(세금)과 물질적 편익(급여 및 서비스)의 차이로, 해당 정책에 따라 발생하는 물질적 비용이 물질적 편익보다 큰 상황에 대해 각 개인이 가지는 인식이라고 할 수 있다. Hetherington(2005)은 정책유형에 따라 비용과 편익의 귀착범위 정도가 달라지는데, 이 때 일정부분 편익보다 비용이 큰 상황에서도 물질적 희생을 부담하고자 하는 성향은 개인이 가진 정부의 신뢰수준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고 주장하였다.

Wilson(1995)은 철도, 전기 등 공공재의 공급으로 대표되는 배분정책은 비용과 편익이 넓게 분산되기에 이를 위한 정부서비스의 증가는 넓은 수혜집단에게 비용과 혜택을 배분한다고 보았다. 반면, 재분배정책의 경우 비용은 모든 시민에게 넓게 분산되는 반면 편익은 특정 계층에게 좁게 집중되는 경향이 있다고 하였다(금현섭·백승주, 2010에서 재인용). 이를 '물질적 희생이론'의 관점에서 해석해보면, 상대적으로 편익이 좁게 집중되는 재분배정책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비용을 부담하는 다수가 비대칭적인 '물질적 희생(material sacrifice)'을 감수해야하며, 이러한 희생을 가능케 하는 역할을 정부신뢰수준이 담당하게 되는 것이다.

'물질적 희생이론(material sacrifice theory)'을 바탕으로 한 실증연구결과에서도 범죄예방, 환경보호, 국방정책과 같이 편익이 넓게 배분되는 정책의 지출 증가에 있어서 정부신뢰수준에 따른 정책지지의 차이는 크게 나타나지 않았다. 반면, 복지정책, 푸드스탬프(food stamp), 아동보호정책, 보건의료정책, 외국인조정정책, 빈민구제정책과 같이 비용에 비해 편익이 좁게 배분되는 재분배정책 지지에 관련해서는 정부신뢰수준에 따른 상호작용 효과가 강하게 나타남이 확인되었다(Hetherington, 2005; Rudolph & Evans, 2005; Hetherington & Rudolph, 2011). 그 중 빈곤가구를 대상으로 한 보육 및 양육료 지원에 대한 지지와 관련하여 잠재적인 수혜 가능성이 없는 집단(가구 내 18세 이하 아동이 없고 빈곤선 이상 소득을 가진 가구)은 비대칭적인 물질적 희생을 초래하는 해당정책에 기본적으로 비우호적 인식을 가졌다. 그러나 물질적 희생을 감수해야 하는 집단 중 상대적으로 정부신뢰가 높은 경우 해당 정책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다소 완화되었다. 반면, 잠재적 수혜가능성으로 인해 물질적 편익을 향유하는 집단의 경우, 정부신뢰 수준은 해당정책 지지수준에 큰 영향을 행사하지 않았다(Hetherington, 2005). 요컨대, 현재적인 복지 편익이나 잠재적 수혜가능성이 동반되지 않은 일방적인 복지비용의 증가는 복지납세자의 물질적 희생수준을 높이기에, 물질적 희생수준이 높은 집단은 기본적으로 복지확충 및 비용부담의사에 대해서는 부정적 인식을 가질 공산이 크다. 하지만 물질적 희생을 경험하는 집단 중 상대적으로 높은 정부신뢰를 가지고 있는 경우, 자신의 물질적 이해를 다소 거스르는 방향의 정책인식을 보여줄 수 있다. 결과적으로 정부신뢰와 권리-의무 간 복지지위와의 상호작용에서 발생하는 동태적 관계는 복지 지지 및 반대 성향을 조절할 것으로 기대된다. 따라서 복지증대를 위한 사회적 합의를 견인하기 위해서는 정책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물질적 부담(세금 및 사회보험료 지출)이 물질적 혜택(급여 및 서비스)에 비해 큰 상황에서도 물질적 희생을 감수하게 하는 정부신뢰의 영향력을 실증적으로 검증해볼 필요가 있다.

(2) 물질적 희생의 개념 및 측정

Hetherington(2005)은 정책유형에 따라 ‘인지된 물질적 희생(perceived material sacrifice)’에 차이가 있으며, 물질적 희생수준은 해당정책에 대한 지지여부 및 수준을 결정한다고 보았다. 이에 국가차원의 정책결정 뿐 아니라 각 개인의 정치적 선택 역시 자신의 물질적 이득을 증진할 수 있는 경제적 합리성에 기초하여 이루어진다고 해석할 만하다(Sears & Citrin, 1982). 즉, 합리적 개인은 자신의 필요에 기초하여 현재 혹은 미래에 개인적인 편익을 제공할 가능성이 큰 정책을 선호하고 지지하는 경향이 있다. 특히 복지정치맥락에서 한 개인은 복지수급자, 납세자로서의 지위를 함께 접하고 있기에, 복지 지위는 권리와 의무의 다면적 상호관계로 이해되어야 한다(안상훈, 2000). 복지인식 형성에 있어 ‘복지권리’와 ‘복지의무’의 역할을 강조한 기존의 실증연구들은 공공복지 수급을 통해 발생하는 물질적 혜택과 납세자로서 부과되는 부담 변수를 각각 투입함으로써 각 개인의 복지수급자, 복지납세자 지위의 개별적인 영향력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동일한 복지정책을 중심으로 서로 다른 이해관계를 가진 집단에게는 비대칭적인 비용과 편익이 발생한다. 즉, 특정 복지정책의 확대가 비용으로 인식되는 집단과 편익으로 인식되는 집단 간 인식의 균열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 주로 경제적 이해관계에 기초하는 복지지위의 특성을 고려할 때, 개인의 소득이나 자산으로 평가되는 부의 수준이 높을수록 복지확대로 인한 납세 부담의 증가는 필연적이다. 그러나 동시에 복제제도를 통해 얻는 혜택이 동반되면, 물질적 이해관계에 따른 개인의 정치적 선택은 다소 상이하게 표출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각 개인을 복지제도를 둘러싼 이익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행동하는 합리적 행위자로 상정하고, 합리적 행위자로서 가지는 복지인식을 살펴보기 위해 각 개인의 다면적인 복지지위를 단일차원으로 통합하여 측정해보고자 한다. 구체적으로 ‘물질적 희생’은 복지제도를 둘러싼 개인적 비용(individual cost)와 개인적 편익(individual benefit)간의 비교·평가로 측정이 가능하다. 개인적 비용은 개인들이 부담하는 조세나 보험료 등이고 개인적 편익은 사회보장급여액으로 측정한다(김태성·성경룡, 2009). 각 개인의 복지지위를 측정하기 위해 조사대상자가 속한 가구단위의 복지부담과 복지혜택 간의 차이에 주목하되, 복지 프로그램 수급 가능성에 따른 잠재적인 ‘물질적 희생’을 측정했던 기존 연구(Hetherington, 2005)와 달리 현재 실질적으로 발생하는 ‘물질적 희생’ 수준에 주목한다. 조사대상자가 속한 가구단위의 물질적 부담(조세 및 사회보험료 지출)이 물질적 혜택(사회보험, 공공부조 급여 및 각종 정보보조금)보다 큰 경우 물질적 희생이 발생한다고 정의한다. 특정 인구사회학적 요인이나 사회경제적지위에 따른 복지욕구의 존재가 반드시 특정 수당이나 서비스 수혜로 연결되지 않는 한국의 복지현실에서, 이와 같은 시도는 복지수혜자 혹은 부담자로서 가지는 실질적이며 구체적인 물질적 이해관계가 복지인식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파악하는데 그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3. 연구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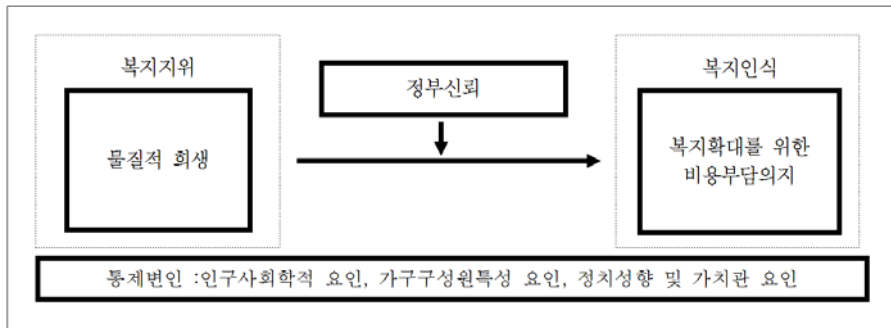
1) 분석자료 및 대상

본 연구의 분석 자료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과 서울대학교 사회복지연구소에서 2013년 공동으로 수행한 「한국복지패널 8차년도」 조사이다. 「한국복지패널 8차년도」 조사는 단단계 층화 무작위추출법으로 전국(제주도포함)에 거주하는 만 15세 이상 가구원이 있는 가구를 추출하였으며, 가구원과 가구용 설문 외에 복지인식에 대한 부가조사를 수행하여 전 국민을 표본으로 하는 복지인식 자료를 제공한다. 본 연구는 전체 응답자 가운데 「복지인식 부가조사」에 응답을 완료한 4,185명 중 개인 횡단면 표준 가중치를 적용한 4,124명의 자료를 분석에 활용하였다.

2) 분석모형

물질적 희생, 정부신뢰가 복지확대를 위한 비용부담의지에 가지는 직접효과 및 물질적 희생이 복지확대를 위한 비용부담의지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정부신뢰의 조절효과를 차례로 검증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분석모형은 [그림 1]과 같다.

[그림 1] 분석모형



3) 분석방법

본 연구는 연구문제 검증을 위해 SPSS v. 21을 활용하여 다음과 같은 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가구경제적 특성을 확인하고자 기술통계를 분석하였다. 이어서 총 4단계 모형으로, 각종 통제변인과 물질적 희생, 정부신뢰를 차례로 투입한 후, 물질적 희생과 정부신뢰 간의 상호작용항을 투입하는 위계적 다중회귀분석(Hierarchical Multiple Regression Analysis)을 실시하였다. 독립

변수, 조절변수, 그리고 상호작용항 간의 다중공선성을 피하기 위한 방법으로 상호작용항은 평균집중화(Mean Centering) 한 후, 구성하였다.

4) 주요변수의 정의 및 측정

(1) 결과변수: 복지인식

복지인식은 복지제도를 둘러싼 가치, 태도, 행동지향 등을 포괄하는 개념으로, 사회복지정책에 대한 국가의 책임정도나 정부의 복지지출에 대한 동의 및 의견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는 복지재정확대에 대한 수용의사를 의미하는 ‘복지확대를 위한 비용부담의자’를 복지인식으로 정의하고, 해당 변수를 통해 연구대상자의 복지지지견해 및 재정적 지불능력을 복합적으로 반영하고자 하였다.

‘복지확대를 위한 비용부담의자’는 “복지예산을 늘리기 위해 세금을 더 걷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찬성하십니까? 혹은 반대하십니까?”에 대하여 ‘매우 반대함’부터 ‘매우 동의함’까지 7점 리커트 척도로 측정된 1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역코딩된 응답점수가 높을수록 복지비용부담에 대한 수용의지가 높은 것이다.

(2) 설명변수

① 물질적 희생

복지지위의 부담-혜택 간 격차에서 발생하는 ‘물질적 희생’은 조사대상자가 속한 가구단위에서 발생하는 복지부담과 혜택 간의 차로 측정할 것이다. 복지제도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물질적 비용(세금)이 물질적 편익(급여)보다 큰 경우 ‘물질적 희생’이 발생한다고 파악할 것이다. 복지혜택은 응답자 가구의 월평균 사회보장급여액을 통해 측정할 것이다. 사회보장급여액은 공공부조(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수급액과 사회보험¹⁾(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 및 공적직역연금(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군인연금), 기타정부보조금(사회수당 성격의 인구학적급여(demogrants)²⁾, 취약계층보조³⁾, 기타보조금⁴⁾의 수급액을 합산하여 추정하였다. 위 변수에는 건강보험급여 및 노인·장애인·아동 대상 사회복지서비스급여와 같이 현물급여로 인한 편익은 반영되지 않았다. 건강·의료서비스 이용 및

1) 사회보험혜택산출에서 건강보험급여로 인한 혜택은 반영되지 않았다. 건강보험은 가입자 및 피부양자의 부득이한 사유를 제외하고, 요양기관이 직접 제공하는 현물급여지급을 원칙으로 한다. 한국복지패널 ‘건강 및 의료’ 섹션에서는 외래이용횟수, 입원횟수, 입원일수 등 의료이용현황변수를 조사하고 있으나, 해당 변수로는 건강 및 의료서비스이용으로 인한 경제적 이익의 직접 추정이 불가하며, 타 사회보장급여와의 측정 단위가 일치하지 않는 현실적 한계로 분석에서 제외하였다.

2) 기초노령연금, 장애수당 또는 장애아동수당, 양육수당(영유아 양육지원) 및 보육료지원

3) 한부모가족지원, 소년소녀가장 보호비, 학비지원, 긴급복지지원금, 근로장려세제, 급식비지원, 에너지 감면 또는 보조(전기료, 가스비 등), 통신 감면 또는 보조(전화비, 인터넷 등)

4) 국가유공자에 대한 보조금, 농업업 정부보조금, 기타 바우처지원금, 기타보조금

사회서비스와 관련된 편익은 비화폐적(non-monetary), 비가시적(intangible)이며(김태성·성경룡, 2009), 경험한 급여의 종류에 따라 실질적으로 환가되는 경제적 이익의 측정 역시 상이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사회보장 현금급여 만을 대상으로 전반적 복지제도를 통해 얻는 화폐적이며(monetary), 가시적인(tangible) 복지혜택을 측정한다.

복지부담은 응답자 가구의 월평균 조세 및 사회보장부담금(사회보험료지출)의 합으로 측정한다. 기존 연구들은 사회적 보호에 대한 재정충당 전략을 크게 조세에 의존하는(tax-finance) ‘베버지리형 복지국가 전략과 사회보험 가입자의 기여금에 의해 충당되는(contribution-financed) ‘비스마르흐 복지국가 전략으로 범주화하였다(Cichon et al, 2004; 김성욱, 2012에서 재인용). 이에 본 연구는 복지국가의 재정충당 전략범주인 일반조세(소득, 이윤, 자본취득에 대한 세금[소득세, 종합소득세, 재산관련 세금[재산세, 부동산세, 자동차세, 기타]주민세, 환경개선부담금, 취득등록세 등]⁵⁾ 및 사회보장기여금(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료)의 합으로 각 가구가 부담하는 화폐적이며(monetary), 가시적인(tangible) 복지부담을 측정한다.

② 정부신뢰

본 연구는 ‘정부에 대한 일반적인 평가 정향으로써 정부의 성과나 산출물에 대한 평가, 혹은 ‘국민의 기대에 정부가 부응하는지에 대해 시민들이 가지는 태도’(Hertherington, 1998)로 정부신뢰를 정의한다. 본 연구에서는 ‘기술적으로 유능한 정부 역할수행에 대한 기대’(Barber, 1983)인 ‘기능적 신뢰’를 기본으로 하되, 여러 정책기능 중 사회정책기능에 대한 평가에 집중하여 정부의 사회정책의 산출물에 대한 평가로 정부신뢰를 측정한다. 정부가 운영하는 사회정책에 대한 기능적 신뢰는 “귀하는 우리나라 정부가 사회정책과 관련된 다음의 각 정책영역에서 얼마나 잘 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혹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십니까?”에 대하여 ‘매우 못하고 있음’에서 ‘매우 잘하고 있음’까지 5점 리커트 척도로 질문한 문항을 사용하였다. 구체적으로 설문에서 제시된 영역은 보건의료, 노인복지, 장애인복지, 보육서비스 및 아동복지, 빈곤예방 및 감소, 실업대응, 성 평등 수준 제고, 주거복지, 교육 등 9 문항이다. 9 문항의 점수를 합산하여 총점이 높을수록 정부가 운영하는 사회정책에 대한 기능적 신뢰가 높은 것으로 해석한다. 본 연구에서의 정부신뢰의 측정항목 신뢰도는 Cronbach $\alpha = .821$ 으로 확인되어, 내적 일관성이 검증되었다.

5) OECD 조세분류 체계에 따르면 총 조세수입이란 ‘소득, 이윤, 자본취득에 대한 세금(taxes on income, profits, and capital gains: 개인소득세+법인소득세)’, ‘사회보장기여금(social security contributions)’, ‘고용에 관한 세금(taxed on payroll and workforce: 고용주 기여분)’, ‘재산관련 세금(taxed on property: 재산세: 부동산과 주택에 부과되는 세금); ‘상품과 서비스에 관한 세금(taxes on goods and services: 일반소비세(부가가치세)와 특별소비세(물품세와 관세))’, ‘기타(other taxes)’의 합으로 구성된다.

(3) 통제변수

① 인구사회학적 요인

여성은 노동시장에서의 차별, 가족보호의 부담 등으로 인해 남성보다 복지제도에 의존하는 경향이 높으며(Svallfors, 1995), 여성의 고용증가는 주로 공공부문의 확대에 기인한다는 측면에서(Sainsbury, 1996, 안상훈, 2000) 남성보다 복지친화적 인식을 가질 가능성이 높다. 남성은 1, 여성은 0으로 코딩한다. 연령변수 또한 연구에 따라 결과의 차이를 보이지만, 복지태도와 밀접한 관련을 가진다. Van Oorschot(2000)는 경제적, 사회적으로 취약한 젊은 계층이 상대적으로 복지국가로부터 많은 편익을 누리므로 복지국가 지지도가 높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고연령층 일수록 복지국가 지지도가 높다는 주장도 있다(Blekesaune & Quadagno, 2003). 결국 연령이 복지인식에 미치는 영향은 구체적인 프로그램에 대한 이해관계 차이에 따라 상이하게 나타난다. 응답자의 연령은 조사시점(2013년)에서 출생년도를 빼 구한다. 교육수준을 통해 획득된 사회적 지위 역시 복지태도에 변화를 가져온다(Derks, 2005). 응답자의 교육수준은 총 교육연수로 구한다.

② 가구구성원특성 요인

각 개인은 본인 및 본인이 속한 집단에 현재 혹은 미래에 개인적인 이익을 제공할 가능성이 큰 정책을 선호하고 지지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Lipsmeyer & Nordstrom, 2003). 복지인식을 설명하는 영향요인 중 잠재적 수혜가능성을 가진 가구구성원의 동거여부를 통제하여야 현재적 복지혜택을 누리는 가구의 권리·의무를 둘러싼 이해관계가 복지인식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분석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였다. 이에 65세 이상 노인이 동거하는 가구, 18세 미만 아동이 동거하는 가구, 장애인 동거하는 가구로 각각 나누어 해당 가구구성원 동거여부가 복지인식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기로 한다.

③ 정치성향 및 복지관련 가치관 요인

공동체주의에 근거하여 평등한 분배정의를 지향할수록 정부의 복지책임을 강조하는 반면(Craig et al., 2006), 시장에서의 노동을 통한 개인의 책임을 강조할수록 정부의 복지책임에 대한 비우호적 인식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유사하게 경제적 개인주의를 신봉하는 우파적 이념, 즉 보수적 정치성향을 가질수록 정부의 복지책임을 반대하는 경향도 일관되게 확인되었다(Rudolph & Evans, 2005). 이에 본 연구에서는 집합주의와 개인주의로 대별되는 분배정의에 대한 가치와 신념이 복지인식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기 위해 보수-진보 간 스펙트럼에서 발견되는 정치성향(“귀하는 자신이 정치적으로 어느 정도 진보적 또는 보수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분배정책 강화에 대한 동의 수준(“귀하는 성장과 분배 중에서 성장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혹은 분배가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복지의 확대가 노동윤리를 훼손하는지에 대한 인식(“사회복지를 늘리면 국민들의 일할의욕이 떨어진다

고 생각하십니까?”), 복지수혜자에 대한 부정적 인식(“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를 받는 빈곤층은 대부분 게으르다고 생각하십니까?”) 등으로 나누어 측정하기로 한다.

4. 연구결과

1) 연구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연구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성별, 연령, 교육수준, 복지욕구를 가진 가구구성원 동거여부, 정치성향을 확인하였으며, 구체적인 분석결과는 아래 [표 1]과 같다.

[표 1] 연구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N=4,214)		
구분	변수	빈도(명)	백분율(%)	
인구사회학적특성	성별	남	1,956	46.4
		여	2,258	53.6
	연령	20대	507	12.0
		30대	819	19.4
		40대	965	22.9
		50대	916	21.7
		60대 이상	1,007	23.9
	교육수준	중학교 졸업 이하	998	23.7
		고등학교 졸업	1,235	29.3
		전문대 혹은 4년제	1,828	43.4
대학원 이상		154	3.6	
가구구성원특성	노인가구원 동거여부	동거	1,198	28.4
		비(非)동거	3,016	71.6
	아동가구원 동거여부	동거	1,655	39.3
		비(非)동거	2,559	60.7
	장애인가구원 동거여부	동거	722	17.1
		비(非)동거	3,492	82.9
정치성향		보수	1,351	32.1
		중도	1,606	38.1
		진보	1,018	24.2
		선택할 수 없음	238	5.7

2) 연구대상자의 가구 경제적 특성

조사대상자가 속한 가구가 부담하는 연간 복지관련 부담 및 혜택은 [표 2]와 같다. 다음의 변수들은 ‘물질적 희생’ 개념을 측정하는 토대가 된다.

해당 가구구성원 전체의 소득세, 종합소득세 등 소득과 관련한 연간 부담하는 세금의 평균은 132.25만원이며, 재산세, 부동산세 등의 연간 재산 관련 부담하는 세금의 평균은 49.24만원, 위의 세금과 더불어 주민세, 환경부담금, 등록세 등 기타 세금까지 포함한 연간 세금 부담액의 평균은 227.55만원이다. 사회보장부담금은 본인부담 보험료만 포함하며 사업장이나 제 3자가 부담하는 보험료는 제외한 비용이다. 연간 연구대상자가 속한 가구구성원 전체가 부담하는 국민연금보험료는 141.27만원, 건강보험료는 128.97만원, 고용보험료는 12.20만원이다. 연간 가구 전체에서 부담하는 사회보장부담금의 평균은 283.63만원이다. 각종 조세와 사회보험료 지출을 합산한 가구 연평균 총 복지부담은 511.19만원이다.

해당 가구구성원 전체가 받는 연간 사회보험소득의 평균은 208.21만원이며, 연간 공공부조 소득의 평균은 23.82만원이며, 사회수당(100.32만원), 취약가구지원(36.19만원), 기타보조금(25.79만원) 합산인 연간 기타정부보조금의 평균은 162.31만원이다. 조사대상자들이 얻는 연평균 총 복지혜택은 394.34만원이다. 총 복지혜택에서 사회보험소득, 공공부조소득, 기타정부보조금소득이 차지하는 비중은 국가차원의 보건복지분야 지출구조를 그대로 반영한다. 실제로 2014년 국가예산 357조원 중 보건복지분야 예산은 106조(29.6%)를 차지하였다. 보건복지예산의 부분별 자원배분 현황을 살펴보면, 공적연금, 고용 및 산재 보험, 건강보험료 지원 등 사회보험제도 운영에 복지예산 총액의 52.7%인 55조 7천억 가량이 배분되어 보건복지예산총액의 절반 이상의 비중을 차지한다. 그 뒤를 이어 노인·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각종 수당 및 서비스에 9조 5백억원(8.6%), 기초생활보장에 8조 8천억원(8.3%), 아동·가족·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각종 수당 및 서비스에 5조 3천억원(5.0%) 등이 차례로 배분된다. 복지예산 ‘100조원 시대’에 진입했지만, 절반이 넘는 자원은 가입자의 기여와 급여에 토대를 두는 사회보험제도에 할당되는 형국이며, 취약계층 및 국민일반의 복지체감과 관련되는 공공부조, 노인, 장애인, 가족, 여성 등을 대상으로 한 사회수당 및 서비스 급여 등은 여전히 제한적인 수준에 그치고 있다(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3).

또한 복지부담·혜택 간 격차에서 발생하는 연구 대상자의 월평균 물질적 희생은 9.74만원이며, 이는 복지제도를 통해 받는 편익 보다는 비용이 월평균 9.74만 원가량 크다는 의미이다. 실제로 응답자 가구에서 발생하는 물질적 희생의 분포를 살펴보면, 복지부담 보다 혜택이 큰 집단(물질적 희생의 값이 음수인 경우)은 전체 연구대상자의 37.8%(1593명)이며, 편익보다 비용이 큰 집단(물질적 희생의 값이 양수인 경우)은 62.2%(2621명)으로 물질적 희생이 발생하는 가구가 그렇지 않은 가구보다 1.5배가량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여전히 많은 국민들이 복지제도 밖에서 복지납세자로서의 의무만을 지고 있으며, 복지프로그램의 성숙도 또한 낮아 복지권리를 누리는 수급자역시도 충분한 복지혜택을 누리지 못함을 의미한다.

[표 2] 연구대상자의 가구경제적 특성

단위: 연간 지출 및 소득액(만원)

구분		변수	평균	표준편차	최소값	최대값
복지 부담	세금	소득, 이윤, 자본취득 관련 세금	132.25	395.80	0	5640
		재산관련 세금	49.24	56.47	0	852
		전체	227.55	492.81	0	5904
	사회보장 부담금	국민연금보험료	141.27	141.55	0	812.40
		건강보험료	128.97	126.56	0	1370.40
		고용보험료	12.20	17.66	0	292.80
		전체	283.63	254.43	0	1776
전체		511.19	677.98	0	7680	
복지 혜택	사회보험 소득	공적연금 연간소득	183.87	664.19	0	7920
		고용보험 연간소득	15.76	85.58	0	880
		산재보험 연간소득	8.58	146.03	0	3371
		전체	208.21	689.26	0	7920
	공공부조 소득	국민기초 생활보장급여	23.82	133.99	0	1906
	기타 정부 보조금	사회수당	100.32	234.57	0	2326
		취약가구 지원	36.19	137.90	0	2164
		기타 보조금	25.79	95.39	0	1350
		전체	162.31	311.27	0	2886
	전체		394.34	756.01	0	7920
물질적 희생 (단위: 월평균 지출 및 소득(만원))			9.74	0.89	-651	640

3) 가설검증

[표 3]의 [모형 1-1]에서 복지확대를 위한 비용부담의지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영향을 주는 통제변수는 성별($\beta = .061, p < .001$), 연령($\beta = .178, p < .001$), 정치성향(보수)($\beta = -.074, p < .001$), 분배정의 동의인식($\beta = .044, p < .01$), 복지국가 역할에 대한 인식($\beta = -.078, p < .001$), 복지수혜자 인식($\beta = -.066, p < .001$)이다. 요컨대, 인구사회학적 특성에서 남성이 여성보다, 연령수준이 높을수록 복지확대를 위한 비용수용성을 높게 가진다. 정치성향과 관련해서 보수적 정치견해를 가질수록, 복지확대를 위한 재정 부담에 소극적 입장을 보였다. 복지국가 관련 가치관 요인에서 성장보다는 분배우선주의 입장을 보일수록 복지확대를 위한 비용부담에 적극적 입장을 보임이 검증되었다.

물질적 희생이 복지확대를 위한 비용부담의지에 미치는 직접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각종 통제변수와 물질적 희생을 투입한 [모형 1-2]을 설정하였다. [모형 1-2]의 설명력은 4.5%(Adj.R²=.045)로 나타나 [모형 1-1]에 비해 설명력이 0.2%p 증가하였으며,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F=17.867, p<.001). [표 3]의 [모형1-2]에서 물질적 희생은 복지확대를 위한 비용부담의지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부(-)적 관계를 보였기에($\beta = -.050, p < .01$), 물질적 희생이 증가할수록 복지확대를 위한 비용부담의 수용의지가 낮아지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정부신뢰의 직접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물질적 희생과 각종 통제변인을 투입한 상황에서 정부신뢰가 복지확대를 위한 비용부담의지에 미치는 영향력을 검증한 [표 3]의 [모형1-3]을 살펴보았다. [모형 1-3]의 설명력은 4.5%로 나타났고(Adj.R²=.045),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F=16.652, p<.001). [모형1-3]에서 정부신뢰는 복지확대를 위한 비용부담의지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정(+)적 관계를 보였으며($\beta = .031, p < .1$), 이는 정부신뢰가 증가할수록 복지확대를 위한 비용부담의지에 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가설을 지지하는 결과이다.

다음으로 물질적 희생이 복지확대를 위한 비용부담의지에 미치는 영향이 정부신뢰에 의해 조절되는지 검증해보기로 한다. 위계적 회귀모형을 통한 조절효과 검증은 상호작용항 투입으로 인한 R² 변화량 및 상호작용항 회귀계수의 유의성 검증을 통해 이루어진다(Whisman & McClelland, 2005). 물질적 희생과 정부신뢰 상호작용을 투입한 이후의 [표 3]의 [모형 1-4]의 설명력은 5.1%로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으며(Adj.R²=.051, F=17.360, p<.001), 유의확률 F 변화량 역시 p<.001으로 유의하게 증가하였다. 이에 상호작용항의 투입으로 인해 [모형1-3]에 비해 종속변수의 변량을 0.6%p만큼 추가적으로 설명하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이어서 개별적인 상호작용항의 유의도를 살펴본 결과, 정부신뢰를 통한 조절효과는 복지확대를 위한 비용부담의지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주고 있었기에($\beta = .078, p < .001$), 정부신뢰의 물질적 희생에 대한 조절효과가 경험적으로 검증되었다. 요컨대, 물질적 희생은 정부신뢰 수준에 따라 복지확대를 위한 비용부담의지에 상이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표 3] 모형 1: 복지확대를 위한 비용부담의지

변수명		[모형 1-1]			[모형 1-2]			[모형 1-3]			[모형 1-4]		
		복지확대를 위한 비용부담의지											
		B	S.E.	β	B	S.E.	β	B	S.E.	β	B	S.E.	β
인구 사회학적 특성	성별	.188	.049	.061***	.187	.049	.061***	.188	.049	.061***	.178	.049	.058***
	연령	.017	.002	.178***	.017	.002	.175***	.017	.002	.169***	.018	.002	.181***
	교육수준	.018	.020	.018	.020	.020	.020	.024	.021	.024	.036	.021	.036 ⁺
가구 구성원 특성	노인가구원 동거여부	-.021	.065	-.006	-.069	.067	-.020	-.074	.067	-.022	-.072	.066	-.021
	아동가구원 동거여부	-.046	.052	-.015	-.043	.052	-.014	-.040	.052	-.013	-.045	.052	-.014
	장애인가구원 동거여부	.113	.065	.028 ⁺	.095	.065	.023	.094	.065	.023	.101	.065	.025
정치 성향 및 가치관	정치성향 (보수적)	-.120	.026	-.074***	-.122	.026	-.075***	-.121	.026	-.074***	-.120	.026	-.074***
	분배정의 동의인식	.088	.032	.044**	.084	.032	.042**	.089	.032	.044**	.085	.032	.042**
	복지국가 역할에 대한 인식	-.077	.017	-.078***	-.077	.017	-.077***	-.079	.017	-.080***	-.077	.017	-.077***
	복지 수혜자에 대한 인식	-.102	.026	-.066***	-.102	.026	-.066***	-.107	.026	-.069***	-.107	.026	-.069***
물질적 희생					-.085	.028	-.050**	-.085	.028	-.050**	-.097	.028	-.057**
정부신뢰								.010	.005	.031 ⁺	.011	.005	.036 ⁺
물질적 희생 X 정부신뢰											.026	.005	.078***
상수		4.348			4.364			4.407			4.314		
R ²		.045			.047			.048			.054		
Adjusted R ²		.043			.045			.045			.051		
ΔR^2											.006***		
F		18.718***			17.867***			16.652***			17.360***		

⁺ p < .1, * p < .05, ** p < .01, *** p < .001

5. 결론 및 논의

본 연구는 복지지위가 복지인식에 미치는 영향이 각 개인의 정부신뢰 수준에 따라 상이하게 나타나는 지 실증적으로 분석하기 위해 수행되었다. 분석결과, 첫째, 조사대상자가 속한 가구단위에서 발생하는 복지부담(조세 및 사회보험료 지출)이 복지혜택(사회보험, 공공부조 및 각종 정부정보조금혜택) 보다 커지는 ‘물질적 희생’이 증가할수록 복지확대를 위한 비용부담의지에 부(-)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이는 각 개인의 복지지위가 내포하는 물질적 이해관계에 상응하는 의식의 분포라고 할 수 있다(Lewin-Epstein et al, 2003).

특히, 여전히 많은 국민들이 복지제도 밖에서 복지납세자로서의 의무만을 지고 있으며, 복지프로그램의 성숙도 또한 낮아 복지권리를 누리는 수급자로서의 확고한 이해관계를 가지기 어렵다. 이러한 한국의 복지현실을 감안하였을 때, 복지수혜가능성이 담보되지 않은 일방적인 부담에서 발생하는 물질적 희생은 복지재원 확충에 대한 적극적 행동의지를 저해할 것이다. 이에 복지수혜범위 확대와 제도의 성숙을 통해 복지수급자로서 지위를 획득하는 사람의 수를 늘리고, 지위의 질을 고양하는 것이 친(親)복지태도를 고양하는 전략이 될 수 있겠다(김은지·안상훈, 2010).

둘째, 사회정책에 대한 정부신뢰가 높을수록 복지에 대한 비용부담을 수용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효율적으로 정책결정을 수행할 것이라는 정부의 능력과 선의에 대한 믿음은 복지부담증대에 따른 자기피해 발생 가능성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감수하게 한다고 볼 수 있다(Mayer et al., 1995). 이는 정부의 역할수행을 신뢰하는 시민은 국가의 세금 낭비 가능성에 대해 덜 비관적이기에 해당영역의 예산확대에 동의한다는 선행연구(Svallfors, 2002; 이현우, 2013)를 지지하는 결과이다.

요컨대, 복지확대로 인한 추가적 조세부담을 감당하는 정치적 선택을 하기 위해서는 자신이 부담하는 복지예산이 적재적소에 효율적으로 집행된다는 믿음이 전제되어야 한다. Glaser & Hildreth(1999) 역시 조세저항은 행정비용과 정부성과를 연결시키는 논리적인 체계를 구축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하며, 정부성과에 대한 긍정적인 믿음은 성과 달성을 위한 비용납부의사 고양에 필수적이라 주장한 바 있다. 이에 본 연구결과는 정부의 복지책임을 실제로 가능하게 하는 재원부담의지 고양을 위해서 본인이 낸 세금이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집행되며, 장기적 관점에서 복지급여로 본인에게 돌아올 수 있다는 사회적 믿음을 구축하는 것이 필요함을 시사한다(윤홍식, 2011; 이현우, 2013).

셋째, 정부신뢰의 복지지위 상의 물질적 희생에 대한 조절효과를 검증한 결과, 정부신뢰 수준이 높을수록 물질적 희생이 복지확대를 위한 비용부담의지에 미치는 부(-)적인 영향을 완충하였고, 이는 Hetherington(2005)의 ‘물질적 희생이론(material sacrifice theory)’을 지지하는 결과이다. 현재적인 복지편익이나 잠재적 수혜가능성이 동반되지 않은 일방적 복지비용의 증가는 복지납세자의 물질적 희생을 발생시킨다. 따라서 이들은 기본적으로 복지확충 및 비용부담의사에 대해서는 부정적 인식을 가질 것이다. 하지만 물질적 희생을 경험하는 집단 중 상대적으로 높은 정부신뢰를 가지고 있는 경우, 자신

의 물질적 이해를 다소 거스르는 방향의 정책인식을 보여주었다.

이와 유사하게 Nagayoshi & Sato(2014)는 복지인식은 자기이해에 입각한 합리적 선택 관점으로만 설명할 수 없다고 주장하면서, 정부의 능력에 대한 제도적 신뢰와의 상호작용을 통해 결정된다고 보았다. 즉, 해당 정책으로부터 수혜를 받지 못하는 집단일지라도 정부가 해당 정책을 효율적으로 수행한다고 여기면, 재분배 정책의 정당성을 의심하지 않게 되는 것이다. Rothstein(1998) 역시 재분배 정책을 수행하는 핵심적인 주체인 정부에 대한 신뢰가 동반되지 않으면, 복지레짐의 정당성이 훼손될 수밖에 없기에, 국민들의 신념체계나 평가로부터 정책의 순응을 확보해낼 수 있는 접근이 중요함을 강조하였다. 결과적으로 정부신뢰와 권리·의무 간 복지지위와의 상호작용에서 발생하는 동태적 관계는 복지 지지 및 반대 수준을 조절할 것이다. 이에 복지증대를 위한 사회적 합의를 견인하기 위해서는, 정책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물질적 비용(조세 및 사회보험료지출)이 물질적 편익(복지급여 및 서비스)에 비해 큰 상황에서도 ‘물질적 희생’을 감수하게 하는 사회정책에 대한 신뢰 확보가 절실하다. 이를 위해 정책대상자들의 다양한 복지요구에 부응하고자 하는 정부의 대응노력이 요구되는 바이다.

이어 본 연구의 이론적 함의로는 첫째, 조사대상자들의 복지지위에서 발생하는 부담·혜택을 단일차원으로써 통합적인 측정을 시도하였다는 점이다. 복지수급자로서 발생하는 물질적 편익과 납세자로서 부과되는 비용 변수를 각각 투입함으로써 그 개별적인 영향력을 파악하였던 기존 복지인식 연구와 달리, 복지지위의 동태적 관계를 포착하였다는 함의를 가진다. 따라서 복지확대로 납세 부담이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동시에 복제제도를 통해 얻는 혜택이 동반되면, 물질적 이해관계에 따른 개인의 복지인식 및 정치적 선택은 다소 상이하게 표출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둘째, 본 연구는 복지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규범적 요인으로써 정부신뢰 변수에 주목하였다. 기존 복지태도 연구들은 복지인식 결정요인으로 정치적 성향, 정당 소속감 등의 변수에 일관되게 주목한 반면, 국민들이 정부에 대해 가지는 있는 평가적 정향(Hetherington, 1998)으로서 정치적 태도의 일종인 정부신뢰의 영향력을 규명하는데에는 다소 소홀하였다. 이에 본 연구는 정부신뢰를 정부정책에 대한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규범적 요인으로 추가적으로 투입하여 기존 복지인식의 연구의 범위를 확장시켰다. 이를 통해 정부신뢰가 복지정치과정에서 왜 중요한지, 특히 ‘복지확대를 위한 비용부담의자’에 어떤 영향관계를 가지는지를 실증적으로 살펴보았다는 점에서 의의를 가진다.

위와 같은 이론·정책적 함의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연구 한계를 가진다. 첫째, 화폐적 이익으로 직접적 추정 불가 및 타 사회보장 현금급여와의 측정 단위 불일치의 현실적 한계로 건강보험급여 및 사회서비스이용 등의 현물성격의 복지급여를 분석에 반영하지 못한 점이 아쉽다. 따라서 후속연구에서는 외래 이용횟수, 입원횟수, 입원일수 등 건강·의료 서비스이용경험 및 가구의 사회서비스 이용경험 등의 현물급여 이용현황을 복지혜택의 경제적 이익으로 간접 추정하는 시도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를 통해 가구 단위의 복지혜택수준을 더욱 면밀하게 반영하고자 하는 보완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

둘째, 2차 자료의 한계로 ‘사회정책에 대한 국민의 평가인 기능적 차원의 신뢰를 기존의 정부신뢰와 동등한 개념으로 규정하여 개념의 타당성이 다소 저해되었다는 한계를 지닌다. 따라서 후속연구에서는 정부신뢰를 두 가지 구성차원으로 분석한 경험적 연구(Barber, 1983)에 비추어, 정부역량에 대한 평가인 ‘기능적 신뢰’와 더불어 수탁(fiduciary)의무를 공공의 이익에 따라 결정·집행할 것이라는 정부선언에 대한 믿음, 즉 ‘윤리적 신뢰’가 각각 복지인식에 미치는 효과를 규명할 필요가 있다. 또한 사회정책을 운영하는 신뢰대상의 속성 중 물질적 희생-복지인식의 경로를 조절하는 핵심적 요인을 규명하기 위해 전문성, 대응성, 능률성, 효과성, 투명성, 공정성 등의 측정요소(손호중·채원호, 2005; 이양수, 2008) 각각의 영향력의 검증이 이루어지기를 제안한다. 더 나아가 공공정책 일반 및 정치, 경제 국정운영 전반에 대한 신뢰의 영향력을 추가적으로 규명하는 것은 친(親)복지인식을 견인하는 정부신뢰의 다양한 차원 및 속성에 대한 구체적인 제언을 가능하게 할 것으로 보인다.

셋째, 정부의 일반적 복지지출에 대한 동의수준으로 측정된 복지인식 변수를 통해 복지국가 전반에 대한 행동지향을 살펴보았으나, 정책의 특성에 따라 달라지는 물질적 희생, 정부신뢰와 각 정책지기간의 관계를 밝히지 못했다는 한계를 지닌다. 실제로 복지정책은 수급집단의 범위에 따라 보편적인 정책과 선별적인 정책으로 나누어지는데, 이에 따른 복지지도의 차이가 분명하다. 일반적으로 사회보험 및 돌봄, 교육과 같이 중산층의 보편적 이해에 기반한 정책지도는 높은 반면, 실업지원, 공공부조와 같이 선별적이고 주변부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정책 지도도는 대체로 낮은 편인데(Rothstein, 1998), 이는 구체적인 정책분야에서 각 개인이 가진 상이한 위험인식과 정치적 이해관계의 균열로 설명이 가능하다(박찬웅 외, 2014). 따라서 후속연구에서는 복지지위 상의 부담·혜택 간 격차가 다양한 정책 유형별 복지인식에 미치는 영향, 그 영향경로에서의 정부신뢰의 조절효과 등에 대해 심도 있는 분석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

■ 참고문헌 □

- 김성욱(2012). 복지지출의 사회적 공급형태와 조세구조의 체계적 조응. *한국사회정책*, 19(4), 251-283.
- 김신영(2010). 한국인의 복지인식 결정요인 연구: 국가의 공적책임에 대한 태도를 중심으로. *조사연구*, 11(1), 87-105.
- 김영순, 어유진(2011). 한국인의 복지태도. *경제와사회*, 211-240.
- 김은지, 안상훈(2010). 한국 복지정치의 젠더메커니즘: 태도의 성별차이와 복지지위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사회복지연구*, 41(2), 309-334.
- 김태성, 성경룡(2009). 복지국가론. 나남.
- 박정훈(2008). 정부신뢰와 정책수용: 전자주민카드 정책을 중심으로. *행정논총*, 46(1).
- 박찬웅, 정동철, 조선미, 김노을(2014). 복지인식의 사회적 배태성: 영역별 국가의 복지 책임지지 요인에 대한 다수준분석. *사회보장연구*, 30(1), 105-141.
- 박희봉, 이희창, 조연상(2003). 우리나라 정부신뢰 특성 및 영향 요인 분석. *한국행정학보*, 37(3), 45-66.
- 백화중, 우해봉(2009). 국민연금제도에 대한 신뢰의 특성과 결정요인. *사회보장연구*, 25(4), 161-186.
- 신자은(2009). 건강보험제도 만족도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 *보건경제와 정책연구*, 15(2), 21-44.
- 안상훈(2000). 복지정치의 메커니즘과 비계급적 균열구조: 복지권과 복지사무에 기초한 세 가지 지위차원의 이론적·경험적 검토. *사회복지연구*, 16(1), 87-115.
- 안상훈, 박종연, 김수완(2013). 주거 관련 물질적 이해관계가 복지태도에 미치는 영향: 주거지위와 연관된 주요 변수를 중심으로. *사회복지정책*, 40(4), 375-398.
- 안치민(1995). 사회복지에 대한 의식과 계급. *사회와 문화*, 9(10), 211-227.
- 윤홍식(2011). 복지국가의 조세체계와 함의. *한국사회복지학*, 63(4), 277-299.
- 이성균(2002). 한국사회 복지인식의 특성과 결정요인. *한국사회학*, 36(2), 205-228.
- 이아름(2010). 한국인의 복지인식 특성 및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 비판과 대안을 위한 사회복지학회 학술대회 발표논문집, 234-264.
- 이양수(2008). 신뢰유형, 관료의 형태, 국정운영평가가 정부역할신뢰에 미치는 영향. *한국행정논집*, 20(2), 533-553.
- 이중섭(2009). 한국인의 복지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사회복지정책*, 36(4), 73-99.
- 이한나, 이미라(2010). 한국인의 복지태도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 *보건사회연구*, 30(2), 254-286.
- 이현우(2013). 복지예산 규모에 대한 태도결정에 미치는 요인분석. *국제정치논총*, 53(2), 249-280.
- 이훈희, 김윤태, 이원지(2011). 한국의 복지태도와 건강보험 인식의 결정요인. *사회보장연구*, 27(2), 1-25.
- 주은선, 백정미(2007). 한국의 복지인식 지형: 계층, 복지수요, 공공복지 수급경험을 중심으로. *사회복지연구*, 34(1), 203-225.
- 최균, 류진석(2000). 복지인식의 경향과 특성. *사회복지연구*, 16(1), 223-254.
-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3). 2014년 보건·복지 예산안의 구조와 쟁점. *보건복지 이슈엔포커스*, 212.

- Andreß, H. & Heien, T. (2001). Four worlds of welfare state attitudes? A comparison of Germany, Norway and the United States. *European Sociological Review*, 17(4), 337-356.
- Barber, B. (1983). *The logic and limits of trust*. New Brunswick, NJ: Rutgers University Press.
- Blekesaune, M. & Quadagno, J. (2003). Public attitudes toward welfare state policies a comparative analysis of 24 nations. *European Sociological Review*, 19(5), 415-427.
- Brooks, C. & Manza, J. (2006). Why do welfare states persist? *Journal of Politics*, 68(4), 816-827.
- Chanley, A., Rudolph, J. & Rahn, M. (2000). The origins and consequences of public trust in government: A time series analysis. *Public Opinion Quarterly*, 64(3), 239-256.
- Craig, C., Gainous, J., Room, H. & Martinez, D. (2006). Political trust and support for social welfare: The role of ambivalence. In annual meeting of the American Political Science Association, Philadelphia: PA.
- Derks, A. (2005). Educational stratification and welfare attitude in six european countries. Paper for the Espane Conference 2005, 22-24.
- Della, D. (2000). Social capital, beliefs in government, and political corruption. Disaffected democracies: What's troubling the trilateral countries, 202-228.
- Frazier, A., Tix, P. & Barron, E. (2004). Testing moderator and mediator effects in counseling psychology research.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51(1), 115.
- Gelissen, J. (2000). Popular support for institutionalized solidarity: A comparison between european welfare states. *International Journal of Social Welfare*, 9(4), 285-300.
- Hetherington, J. (1998). The political relevance of political trust. *American Political Science Review*, 92(4), 791-808.
- Hetherington, J. (2005). *Why trust matters: Declining political trust and the demise of American liberalism*. Princeton University Press.
- Hetherington, M. & Rudolph, J. (2011). Trust, sacrifice, and public support for health care reform. In APSA 2011 Annual Meeting Paper.
- Kim, E. (2005). The role of trust in the modern administrative state an integrative model. *Administration & Society*, 37(5), 611-635.
- Kroneberg, C. (2010). The definition of the situation and variable rationality: The model of frame selection as a general theory of action. Sonderforschungsbereich 504 Publications 06-05, University Mannheim.
- Lewin-Epstein, N., Kaplan, A. & Levanon, A. (2003). Distributive justice and attitudes toward the welfare state. *Social Justice Research*, 16(1), 1-27.
- Lipsmeyer, C. & Nordstrom, T. (2003). East versus West: Comparing political attitudes and welfare preferences across european societies. *Journal of European Public Policy*, 10(3), 339-364.
- Mayer, C., Davis, H. & Schoorman, D. (1995). An integrative model of organizational trust. *Academy of management review*, 20(3), 709-734.

- Muller, E. & Zucam, T. (1977). On the meeting of political support. *American Political Science Review*, 71(4), 1561-1595.
- Nagayoshi, K. & Sato, Y. (2014). Who supports redistributive policies in contemporary Japan? An integrative approach to self-interest and trust models. *International Sociology*, 29(4), 302-323.
- Newton, K. (2001). Trust, social capital, civil society, and democracy. *International Political Science Review*, 22(2), 201-214.
- Pharr, J., Putnam, D. & Dalton, J. (2000). Introduction: What's troubling the trilateral democracies? In J. Pharr & D. Putnam, (eds). *Disaffected democracies: What's troubling the trilateral countries?* Princeton University Press.
- Pierson, P. (2001). *The new politics of the welfare state*, Oxford University Press.
- Putnam, R., Leonardi, R. & Nanetti, R. (1993). *Making democracy work: Civic traditions in modern Italy*, Princeton University Press.
- Rose, R. (1991). Is American public policy exceptional? In E. Shafer(ed.). *Is America different: A new look at American exceptionalism*. Oxford University Press.
- Rothstein, B. (1998). *Just institutions matter: The moral and political logic of the universal welfare stat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Ruscio, P. (1999). Jay's pirouette, or why political trust is not the same as personal trust. *Administration & Society*, 31(5), 639-657.
- Rudolph, J. & Evans, J. (2005). Political trust, ideology, and public support for government spending. *American Journal of Political Science*, 49(3), 660-671.
- Sears, O. (1982). *Tax revolt: Something for nothing in California*, Harvard University Press.
- Sims, H. (2001). *Public confidence in government, and government service delivery*. Ottawa: Canadian Centre for Management Development.
- Svallfors, S. (1995). The end of class politics? Structural cleavages and attitudes to Swedish welfare policies. *Acta Sociologica*, 38(1), 53-74.
- _____ (2002). Political Trust and Support for the welfare state: Unpacking a supposed relationship. In B. Rothstein & S. Steinmo, (eds). *Restructuring the welfare state, political institutions and policy change*. New York: Palgrave.
- Van de Walle, S. & Bouckaert, G. (2003). Public service performance and trust in government: The problem of causality. *International Journal of Public Administration*, 26(8-9), 891-913.
- Van Oorschot, W. (2000). Why pay for welfare? A sociological analysis of reasons for welfare. *The Netherlands Journal of Social Sciences*, 46, 15-36.
- Vigoda-Gadot, E. (2006). Citizens' perceptions of politics and ethics in public administration: A five-year national study of their relationship to satisfaction with services, trust in governance, and voice orientations. *Journal of Public Administration Research and Theory*, 17(2), 285-305.
- Welch, W., Hinnant, C. & Moon, J. (2004). Linking citizen satisfaction with e-government and trust in government. *Journal of public administration research and theory*, 15(3), 371-391.

◀ Abstract ▶

The Effect of Welfare Status on Welfare Attitudes: Focusing on the Moderating Effect of Trust in Government

Choi, Go Eun*

This study was carried out to empirically analyze the hypothesis that the impact of the welfare status on the welfare attitudes is moderated by each individual's level of confidence in government. To do this, this study focused on the welfare status known as the significant predictors of welfare attitudes and measured the welfare status as a gap between 'welfare contribute' and 'welfare benefit' in a single dimension, which is defined as 'material sacrifice'. Also, this study examined the main effect of material sacrifice and trust in government on the welfare attitudes and moderating effect of trust in government on relationship between material sacrifice and welfare attitudes.

This study was performed with secondary data from 8th year of 「2013 Korea Welfare Panel Study」. Hypothesis of this study were verified using hierarchical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The major findings of this study are summarized as follow. 'Material sacrifice' was found to be negatively associated with the welfare attitudes. However, as the confidence in which social policies will be carried out competently by government increases, it was confirmed that the negative effect of material sacrifice on the welfare attitudes was moderated. It suggests that self-material interests associated with welfare could be moderated by beliefs and expectations about the government's functions, which means that expanding the reliance on the social policy is an important task in order to lead a social consensus for the welfare expansion.

Key Words: welfare status, welfare benefit, welfare contribute, material sacrifice, trust in government, welfare attitudes

◆ 2016.01.01. 접수 / 2016.02.26. 1차 수정 / 2016.02.29. 게재확정

* Master's Degree, Dept. of Social Welfare, Seoul National University(superchoigo@snu.ac.kr).